

#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 평 해제 ‘역대 최대’

### 윤 대통령, 충남서 민생토론회 “안보 지장 주지 않는 곳 주민 수요 검토해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1억300만 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국방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는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가 단행됐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km<sup>2</sup>),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km<sup>2</sup>),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km<sup>2</sup>) 등 총 339km<sup>2</sup> 규모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는데, 이를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충청남도 서산과 경기도 성남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에서도 군사기지 및 시설의 유무,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이 해제된다.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축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차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공공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약 141km<sup>2</sup>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성남 소재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에서 약 72km<sup>2</sup>, 서울특별시에서 약 46km<sup>2</sup>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어 경기 포천(21km<sup>2</sup>), 양주(16km<sup>2</sup>), 세종특별자치시(13km<sup>2</sup>) 경기 연천(12km<sup>2</sup>) 가평(10km<sup>2</sup>) 순으로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넓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km<sup>2</sup>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km<sup>2</sup>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선거구 획정안 국회 처리 임박... ‘영암·무안·신안’ 공중분해되나

### 획정위 제출 원안 확정 가능성 지역 정치권 선거구 조정 호소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하면서 선거구 조정을 요구하는 지역 정치권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이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애초 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자칫 원안대로 총선을 치를 경우 영암·무안·신안 선거구가 공중분해되고, 1개 선거구에 3~4개 지자체가 포함되면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농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 중·서부권 광역·기초의원들은 2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선거구 획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 대로 의결될 경우 인구 비례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기존 전남 선거구는 동부권 4개(선거구별 18만 9258명)와 중·서부권 6개(“ 17만 6613명)였지만, 이번 획정안은 동부권 5개(“ 15만 1406명)와 중·서부권 5개(“ 21만 1935명)로 조정해 인구 비례 원칙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또 3~4개 지자체를 묶어 지역 대표성도 없을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지방의원들의 주장이다.

선관위 획정안은 전남은 의석수 10개를 유지하되 동부권은 4~5석, 중서부권은 6~5석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을 선거구는 순천 갑과 을로 나누고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별도로 분리하도록 했다.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의 경우 영암을 기존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 포함시키고 무안은 나주·

화순, 신안은 목포에 합치는 방안이다.

지역 총선 후보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이면서 나주 화순 선거구 3선을 노리는 신정훈 예비후보는 최근 호소문을 내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농·산·어촌 의석수 축소는 ‘지방 죽이기’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선거구 최후순 예비후보도 “또다시 줄속으로 ‘개리멘더링’을 정당화해서는 곤란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여야 국회의원들이 손을 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선거구가 해체될 위기에 놓인 서삼석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은 획정 때마다 다른 지역 선거구에 붙었다 때었다를 반복하면서 농촌 지역의 의석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43.5%·민주당 39.5%

### 리얼미터, 윤 긍정 평가 41.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약 8개월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예니지경제연구소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p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9%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2월 13~16일)보다 2.4%p포인트(p)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4주 연속 상승하면서 작년 6월 5주차(42.0%) 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에 40%대로 올라섰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2.4%p 하락한 54.8%였다.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대구·경북(4.8%p ↑), 부산·울산·경남(4.5%p ↑), 인천·경기(3.1%p ↑), 광주·전라(2.5%p ↑), 대전·세종·충청(2.0%p ↑) 등 전 지역에서 올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

행됐고 응답률은 3.7%였다.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43.5%, 더불어민주당이 39.5%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4.4%p 올랐고, 민주당은 0.7%p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2월 2주차(40.9%) 이후 2주 만에 다시 40%대로 올라섰고, 민주당은 작년 2월 3주차(39.9%)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부산·울산·경남(7.8%p ↑) 등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2.0%p 내린 4.3%, 녹색정의당은 0.2%p 내린 2.1%, 진보당은 0.5%p 오른 1.6%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에 없는 무당(無黨)층은 2.9%p 하락한 5.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국힘, “총선 160석 가능 발언 자제하라” 경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당직자나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총선 예상 의석수를 과장되게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갈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 내부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밤 당직자와 후보 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기에 많이 부족하고 더 열

심히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낮은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메시지는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의석수로 150~160석을 예상한 뒤에 나왔다.

경기 안산 상록갑에 탄수공천을 받은 장 전 기획관은 MBN에 출연해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은 누구나 아는 정쟁 프레임”이라며 “정쟁을 만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영부인 특검 놀이를 간다? 그러면 총선은 민주당이 110석 그 상한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국민의힘은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 위원장은 연일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토피 초등학교, 장성으로 유학오세요

## 아토피 유학 설명회

- 장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 일시 : 2024년 02월 28일 (수요일) 15:00

### 우리 아이 아토피! 온 마을이 함께합니다

- 피부과 전문의 및 한의원의 정기 진단 진료
- 통합의약의 입장에서 전문약사가 진행하는 숲이 보낸 처방전
- 숲해설가 및 산놀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숲속 놀이
- 놀이 전문가가 진행하는 황토길 산책 및 맨발걷기
- 전문한의사를 한방주치의 제도 아토피 제로
- 교육심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 숲에서 이루어지는 1박2일 가족캠프

## 특별혜택 - 거주 펜션 지원 (선착순 30명)

축령산 자연속에서 신나게 놀아요  
아토피 관련 치유 프로그램  
다양한 방과후 특별교육(물놀이 숲놀이)

## 1급수 축령산 모암저수지

## 어린이 물놀이터, 숲놀이터

## 개장예정

전라남도 장성교육 지원청 (061) 390-6000